

해 외 출 장 결 과 보 고

1. 출장건명 : OECD 환경위원회 고위급 회의 참석

2. 출장목적

-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 의장으로 환경위원회 고위급 회의 참석

3. 출장기간 및 출장자, 출장지

- 출장기간: 2014년 4월 22일 ~ 4월 26일(3박 5일)

- 출 장 자: 선임연구위원 김창길

- 출 장 지: 프랑스 파리

4. 출장일정

일자	이동상황	방문기관	주요 사항
4월 22일(화)	서울 → 파리		· 숙소 도착
4월 23일(수)	파리 체류	OECD본부	· 2015년 이후 OECD장관급회의, 녹색성장, NAEC 관련 논의 · 2015-2016 주요 사업 및 예산(PWB) - 농업환경정책위원회 농업환경작업반(JWPAE) PWB 관련 의제 발표 · PWB 관련 EPOC의 주요 전략에 대한 고위급 논의 · 최근 OECD 발간 및 진행 보고서 관련 정책 메시지 - 기후과년 정책 OECD 사업 - 교통부문의 건강 영향 - 환경정책과 경제적 결과의 엄중성(stringency)
4월 24일(목)	파리 체류	OECD본부	· CIRCLE 프로젝트 - 1차결과 및 정책결정자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 - CIRCLE 미래 과제 · 2015-2016 과업과 프로그램 논의 - 주요 쟁점 2차 토론 - 예산관련 종합토론 · 위원회 관리 이슈 - EPOC 심층평가 이후 실행계획 진도보고 - 환경성과작업반의 2012년 이후 환경성과검토 새로운 양식에 대한 평가 - 2015년 의장단 선출 - 기타의제
4월 25일(금) ~ 4월 26일(토)	파리 → 서울		· 회의결과 보고서 작성 · 귀국

OECD 환경정책위원회 고위급 회의 결과보고

I. OECD 환경정책위원회 고위급 회의 개요

- 회의명칭 : OECD 환경정책위원회 고위급 회의(Meeting of the Environment Policy Committee at High Level)
- 회의기간 및 장소
 - 기간: 2014년 4월 23일 ~ 4월 24일
 - 장소: OECD 본부 6회의실
- 회의참석 우리나라 대표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박사(JWPAE 의장)
 - 주OECD대표부 정선화 과장(환경부 소속)

※ OECD 환경정책위원회 고위급 회의는 회원국 전체 34개 국가에서 최소한 1명 이상의 대표자가 참석하였고, 우리나라는 2명, 일본3명, 프랑스 9명, 네덜란드 5명, 노르웨이 5명, 미국 3명, 환경정책위 관련 작업반 의장 4명, OECD 사무국 14명, EU 4명, BIAC 3명, TUAC, UNECE 등 국제기구 와 비회원국으로 콜롬비아 5명, 라트비아 3명, 러시아 3명, 중국 2명, 남아프리카 4명, 코스타리카 2명, 리투아니아 1명 등 총 160여명이 참석하였음. 특히 환경정책위 고위급 회의에는 양헬 구리아 OECD사무총장과 린타로 타마키 사무차장 등 사무국에서 고위급이 참석하였으며, 환경위원회 관련 JWPCID(기후투자발전 합동작업반), JWPER(환경검토합동작업반), JWPRPW(자원성과성 및 폐기물합동작업반), JWPAE(농업환경합동작업반) 등 네 작업반의 의장이 참석함.

II. 주요 의제내용 및 논의 결과

1 양행구리아 OECD 사무총장 연설

- OECD 환경문제와 관련 환경정책위원회(EPOC)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어 오고 있지만, 수평적이 협력(horizontal collaboration)을 위해 IEA, DAC, EPC, IC 등 관련된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다루는 것이 필요함.
- 최근에 발표된 IPCC 제5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서는 지구평균 온도가 산업화이전 대비 2℃ 이상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0~70%를 감축해야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21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에 가깝게 줄이는 야심찬 감축목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음.
-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탄소 가격 설정, 화석연료 부과금, 배출권거래제, 탄소세와 규제제도, 혁신 등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이 논의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책결합(policy mix)임. 어떻게 적절하게 정책을 결합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느냐가 관건임.
- 물과 물안보는 최근 OECD의 주요이슈(cutting-edge issue)임. 반기문 UN사무총장도 물 부족 문제를 강조하고 있고 OECD에서 물 이슈를 잘 다루어주길 요청함.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1)를 앞두고 OECD는 여러 가지 많은 과제를 추진해야 함.
- 최근 경제적인 도전과제를 다루기 위해 ‘경제적 도전의 새로운 접근(New Approaches to Economic Challenges, NAEC)’ OECD 에서 핵심어젠다고 다루어지고 있음. 정책분석의 상충(trade-offs)과 보완(complementaries), 불평등과 경제성장, 환경과 경제성장의 상호작용,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도전 등 다루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음.
- 여러 가지 도전과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OECD 회원국은 물론이고 비회원국도 포함시켜 다루는 총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이 필요함. 또한 각 해당된 분야와 함께 관련된 분야를 포괄하여 다루는 수평적 접근(horizontal approach)의 중요성을 강조함.

-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CIRCLE프로젝트, 환경정책집행의 엄격성, 녹색성장 이니셔티브 등은 OECD의 핵심과제로 볼 수 있음. 환경분야는 고용, 교육, 보건, 후생 등 여러분야에 영향을 미치므로 EPOC의 중요성이 강조됨.
- 경제발전검토위원회(Economic and Development Review Committee, EDRC)는 회원국의 경제동향 조사, 구조개혁, 환경동향, 노동이슈 등을 다루게 되며, 회원국의 경제동향은 물론이고 OECD전체의 경제전망을 제시함. 최근 환율과 가격 등의 급등과 급락 등 Overshooting 이슈에 대한 처방도 중요한 과제임.
- 다음달 5월 6일부터 7일 양일간 2014년 OECD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 Meeting, MCM)가 “복원력 있는 경제와 포용적 사회(Resilient Economies and Inclusive Societies)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임. 환경분야도 NAEC에서 다루는 주요 세부주제의 하나로 중간보고서 형태로 공개될 예정임. 주요 정책 간 상충을 줄이면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안이 소개될 것으로 기대됨.

2 기후관련 정책 주요 OECD 과업

□ 주요내용

- OECD는 기후 및 기후관련 정책과 관련하여 수십년간 연구를 수행해옴. 이 문서는 환경정책위원회, 개발원조위원회, 투자위원회,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 금융시장위원회, 농업위원회, 수산위원회 등을 포함한 여러 위원회의 참여로부터 도움을 얻음.
- 본 보고서의 목적은 EPOC가 관심을 갖는 기후관련 정책에 관해 수행한 최근 연구들을 조명하는 것임. 기후에 관한 폭넓은 인벤토리는 OECD 기후 웹사이트(www.oecd.org/environment/cc)에서 제공됨.
- 기후관련 정책에 대해 OECD에서 다루어 온 선택된 과업에 대해 개관함. 환경정책위원회와 여러 관련 위원회에서 지난 수십년동안 기후 관련 정책을 다루어 왔음. 이 문서에서는 최근 환경위원회가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의 기후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진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봄.
- EPOC 핵심 논의과제

1) UNFCCC 협상 지원

- OECD-IEA 기후변화 전문가그룹(CCXG)은 기후변화협상에 있어 기술적 이슈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대화를 실시하고자 중립적 플랫폼을 제공함.
- 2014년 CCXG 연구는 2015년 협상과 관련 유연하고 지속적인 동의가 이루어지는 방안과 기후금융을 복재하고 향상시킬 방안 등에 대한 상이한 주제 간 연계 등의 가능한 구조를 언급하는 데에 초점을 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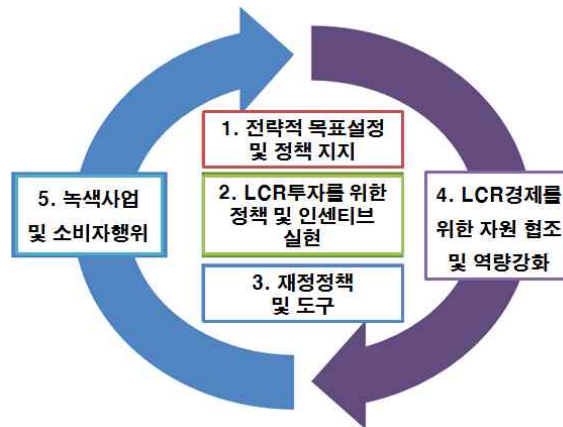
〈그림〉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되는 COP21 관련 로드맵



2) 국내 녹색투자 정책 프레임워크 강화

- 최근 OECD 연구 역시 녹색금융 및 투자, 지역정책 기본골격 등에 초점을 두고, 2°C 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적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도전의 규모는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모든 정책들을 살펴보고, 분명하고 일관성있고 논리적인 징표가 투자자, 제작자,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함.
- 녹색투자정책 프레임워크는 다음의 요소를 포함함<그림 1>
 - 초정부적 및 정부 내 목표설정 및 지원정책

〈그림 1〉 녹색투자를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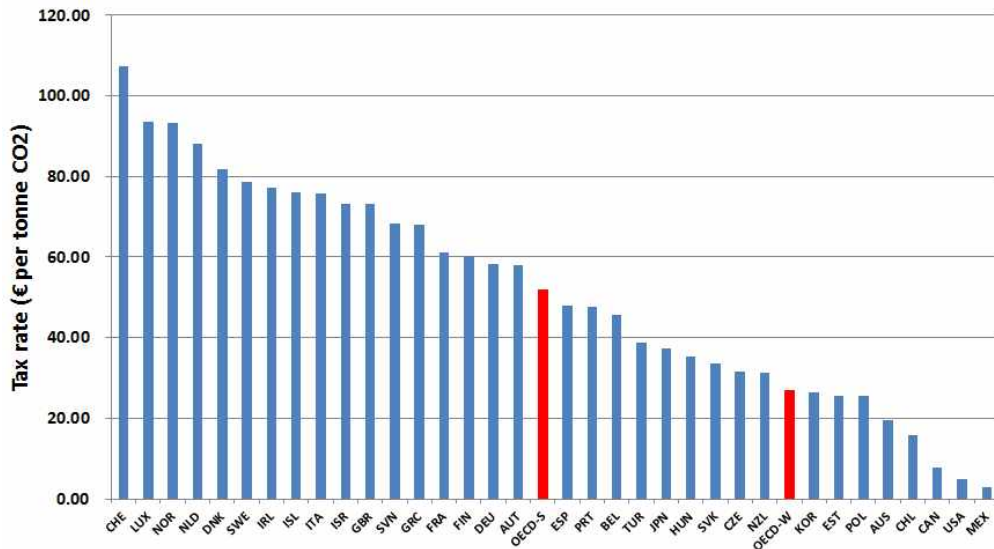
- 투자 실행 및 LCR인프라투자를 위한 시장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정책 개정
- 신규녹색기술을 위한 전환지원 상세한 금융정책, 규제, 도구 및 수단 마련
- 자원협조 및 역량강화
- 녹색사업 및 소비자행위 도입

3) 탄소가격 설정

- 프레임워크의 핵심요소는 탄소가격제이며, 배출된 CO2톤당 명시된 가격을 설정하는 것임. OECD 보고서 「기후 및 탄소: 정책 및 가격」은 최저가격으로 배출감축을 달성할 기술 중립적 인센티브임을 강조함.
- 효과적인 탄소비율은 국가들 마다 그리고 상이한 에너지이용에 따라 매우 다양함. 또한 각 항목별 같은 용도의 연료들에 따라서도 상이함.
- 화석연료 및 전력보조금을 줄인 OECD국가들의 경험을 통해 네 가지 성공의 공통전략이 제시됨.
 - 특정 정책에 호의적인 당과 적대적인 당 사이의 토론을 촉진하는 지표에 대한 데이터의 가용성 및 투명성 증진. 좋은 데이터를 통해 상호검사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고 미래지원 개혁에 순응을 장려
 - 전환기간 동안 취약한 그룹에 대한 금융지원 제공
 - 가능한 곳으로 하여금, 넓은 구조적 개혁 상의 세제 및 화석연료 개혁을 통합
 - 취약한 그룹을 보상하고 유익한 방식으로 공공편드를 충당할 정부의 공약을 입증함. 의사소통 전략, 적절한 지원금 폐지 시점, 보조적 사회정책

수행 등을 통해 달성 가능

〈그림〉 OECD 회원국의 CO₂에 대한 평균 실효세율(%)



4) 기후변화 적응 지원

- 잘 설계된 적응전략은 비용효과적이지만, 적절한 금융지원이 요구됨. 적응의 선불 비용은 기후를 대비한 인프라시설에 요구되는 것들임. 소위 연성 및 간접적 조치들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기후 복원력 증대에 기여함.
- 융통성에 대한 필요를 인식함으로써 많은 OECD국가들이 기후변화 적응 수행을 위해 따로 떼어놓은 펀드이동을 기피하고 기후복원력에 대한 공공부문투자에 대한 주요 접근방법을 이용함.
- 성공적이기 위해서, 본 접근은 다른 우선순위에 비해 적응에 대한 투자를 유지할 강력한 의사결정 도구 및 적절한 증거와 함께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적응을 통해 기후 위험을 감소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위험전가 및 위험분담 메커니즘을 통해 위험관리를 증진시키는 것도 중요함.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 내, 자연재해 및 기후관련 현상들로 인한 유사하고 비보험 손실들이 증가 중이고 이들은 가계, 기업, 정부가 매개하고 있음. 그 와중에, 기존 계획에서 나온 잘못된 인센티브는 위기감소활동에 대한 투자를 방해할 수 있음. 본 영역 상 우선순위는 외연을 확대하고 비보장 손실 증가에 대한 지급력을 보장하고, 위험분담과 위기감소활동을 연계하는 것임.

□ 검토의견

※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및 코멘트

① OECD가 기후관련 과업의 영향력을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정책 논의와 협상에 어떻게 증가시킬수 있을 것인가?

- OECD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대한 경제적 분석적 결과는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됨. 특히 회의를국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정책인벤토리 제시와 효과성과 효율성이 높은 핵심적인 정책수단(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 등)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감축에 비해 적응의 경우 민간투자 유인이 적다는 점에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상이한 전략이 필요하며,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정보 제공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며, 공공개입 수단을 잘 디자인하고 환경조성 등 정책 프레임워크 마련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함.
- 최근 신기후체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감축 공약을 허용하되 각 당사국이 제출한 감축 기여가 의욕적이고 적절하며 공정하다는 적절한 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특히 OECD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완화와 적응 관련 경제적 분석모형(CIRCLE) 개발과 보완에 수년동안 노력을 기울여 왔으므로 이러한 분석결과가 파리에서 개최되는 COP21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시간이 얼마남지 않아 의제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과제가 설득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제시될 수 있도록 좀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② 2015-16 PWB 제안 프로그램에서 논의를 필요로 하는 기후관련 이슈에 격차가 있는지?

- PWB에서 기후변화 관련 의제와 관련하여 사무총장의 우선순위를 가지는 분야로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해 이해를 깊이하고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하는 과제와 녹색투자를 포함한 장기적 투자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히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제고와 온실가스 감축 등을 통한 완화 과제는 글로벌 핵심과제로 차기 PWB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핵심은 필요한 정책실행에 어느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실질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녹색투자가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이므로 OECD 신뢰성 있는 분석결과가 관련분야의 정책결정자들의 의사결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대응하여 PWB <산출영역 2>에서 기후변화와 자연자원관리, 기후복원경제 지향, CCXG와 UNFCCC의 과업, 기후적응과 발전에 관한 보고서, 물 경제학 및 정책, 생물다양성 경제학과 정책 등 여섯가지 세부과업을 제시하고 있음. 대부분의 과제는 한국의 경우 기존에 상당한 기간동안 논의된 과제로 판단되나 기후변화 복원경제와 관련하여 녹색금융, 투자 및 규제 등은 새로운 어젠다로 OECD논의는 회원국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가능하다면 기후변화에 대응한 완화와 적응과 관련하여 논의는 각각의 분야에서 별도로 논의가 필요하지만 양 대책의 시너지와 상충(tradeoff)을 비교 분석하여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논의도 차기 PWB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된다면 회원국의 기후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논의결과

- 포르투갈은 OECD가 UNFCCC 기후협상에 기여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적응과 관련하여 토지이용계획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함.
- 폴란드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완화대책이 중요하나 적응도 상당히 중요하므로 비중을 가지고 다루어야 하며, 2030년 감축목표는 너무 야심적인 것으로 사료되므로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함.
- 네덜란드는 OECD가 기후협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모형(CIRCLE)을 이용한 분석적인 부분으로 보이며, 완화 대책과 관련하여 중장기 대책도 중요하나 단기적인 대책에도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야 함을 강조함.
- BIAC(OECD 기업 및 산업자문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적절한 투자가 수반되어야 하면 특히 민간부문의 투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기후변화 대응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오스트리아는 OECD의 기후변화 연구는 정책결정자의 정책수립에 크게 도움이 되며 특히 탄소가격 설정 분야를 강조함. 적응분야에 대한 경제분석 연구는 중요하면 오스트리아에서 관련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져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스위스는 기후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이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져야 하며, 기후변화 완화대책 모색을 위해서는 인센티브와 투자 확대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함. 프랑스는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되는 COP21에 OECD가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관련 모형작업 등 실증분석에 박차를 가해야 함을 강조함. 아일랜드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관련된 분야와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수평적 접근의 중요성, 미국은 지구전체적 접근도 중요하나 지역적 수준(sub-national level)에서 접근과 극지역의 온난화 문제와 블랙카본 이슈 등을 비중있게 다루어야 함을 강조함.
- 이탈리아는 에너지 효율성과 보조금 폐지, 탄소가격 설정 접근에 있어서 규범적 접근, 감축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정치적인 고려 등의 중요성을 강조함. 칠레는 탄소가격과 관련하여 톤당 가격설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와 완화와 적응대책과 관련하여 비용/편익 분석도 적절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스위스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녹색투자와 동남아시아의 녹색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함. 이밖에도 독일은 시장지형적 정책과 무조치의 경제적 비용과 조치의 경제적 편익 등의 중요성을 강조함.
- OECD 사무국은 기후변화 대응 분석적 연구를 통해 기후협상과 회원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후관련 과제를 추진하며, 특히 재정(financing), 적응관련 위험분석, 극지역의 블랙 카본(불완전 연소로 생성되는 그을음) 등을 적절하게 다룰 계획임을 밝힘. 의장은 OECD가 기후변화 이슈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중장기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측면에서 실증분석이 필요하며, 완화와 적응의 균형적 접근, 극지역과 위험분석 등에 상당한 비중을 다루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함.

③ 2015-16 과업 프로그램 및 예산 - 개관

□ 주요내용

- 환경위원회 2015-16 예산의 주요 전략적 방향
 - JWPAE, JWPTE, JMTEE 등 주요 작업반 과업의 균형적 추진
 - 환경위원회 관련 글로벌 관계 전략과 화학위원회의 주요한 목적을 반영
 - 환경위원회와 여타 위원회간의 수평적 연계를 잘 정립

- 환경위원회의 중점 분야
 - 환경성과 검토, 지표와 전망
 - 환경수단, 혁신 및 부문 정책
- OECD 사무총장의 실질적 우선순위를 가지는 이슈
 - 수평적 프로젝트(녹색성장, 혁신, 기술 등)의 과업 분야
 - 경제적 과제의 새로운 접근(NAEC)과 주류(mainstream)의 결과를 위원회의 과업으로 적용
 - 지속가능하고 보다 형평성있는 성장을 추구하는 포용적 녹색성장(inclusive green growth)
 - 보다 수익이 될 수 있는 직업을 유발하는 정책 개발
 -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해 이해를 깊이하고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하는 과제
 - 녹색투자를 포함한 장기적 투자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히는 과제
 - 목표로 하는 지역적 프로그램(동남아시아 지역)에 키 파트너의 참여 확대 노력
- PWB 주요 골격
 - 1) 산출영역 1: 환경적 동료검토(peer review), 지표 전망, 중간진도보고서
 - 회원국 및 중국 등 주요 파트너의 환경성과 검토
 - 지표 보고서: 산정 및 업데이트된 데이터베이스
 - ‘무행위와 자원희소성의 비용: 장기적 경제성장을 위한 결과(Cost of Inaction and Resource Scarcity; Consequences for Long-term Economic Growth, CIRCLE)’ 에서 2050년 환경전망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 정도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룸
 - 새롭게 부각되는 환경적 우선분야: 부각되는 오염물질 관리, 해양 쓰레기, 빅데이터와 환경정책, 부가적 생산과정의 환경적 및 자원적 함축성
 - 2) 산출영역 2: 기후변화와 자연자원관리
 - 기후복원경제 지향 - 녹색금융, 투자 및 규제
 - CCXG와 UNFCCC의 과업
 - 기후적응과 발전에 관한 보고서
 - 물 경제학 및 정책
 - 생물다양성 경제학과 정책
 - 3) 산출영역 3: 환경, 건강 및 안전성

- 자료의 상호수락에 대한 위원회 결정 집행을 위한 수단
- 현대 바이오테크놀로지 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규제감독의 조화를 위한 수단
- 살충제와 살생물제의 평가와 관리를 위한 수단
- 화학적 사고 방지수단

4) 산출영역 4: 환경수단, 혁신 및 부문 정책

- 물질과 폐기물의 자원생산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 환경정책 수립과 평가
- 무역과 환경
- 재정적 자료에 대한 정보

※ !OECD 사무국은 환경정책위원회(EPOC)의 2015~16 PWB 9개 어젠다를 핵심질문(8가지)에 맞추어 9×8 행렬 방식을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제시함.

<그림> EPOC의 2015-16 PWB 어젠다의 개관



□ 검토의견

- OECD 사무총장의 우선순위에서 제시된 지속가능하고 보다 형평성있는 성장을 추구하는 포용적 녹색성장(inclusive green growth)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목표로 하는 지역적 프로그램(동남아시아 지역)에 키 파트너의 참여 확대 노력에 대한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 농업환경합동작업반의 2015-16 PWB의 핵심 어젠다로 기후변화와 농업, 녹색성장, 물, 농업환경정책의 모니터링과 평가 등으로 설정하고 있어 EPOC의 핵심 어젠다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논의결과

- 포르투갈은 PWB 어젠다 개관과 관련 행렬 이용은 새로운 접근으로 참신하며, 생물다양성과 에코시스템 어젠다 및 CIRCLE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함. 필란드는 녹색경제와 환경유해 보조금, 극지방 환경문제 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룰 것인지가 포함되어야 함을 지적함.
- UN의 유럽경제위원회는 환경이슈를 다루는데 있어 전체론적 접근(holistic approach)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토지-물-에너지 연계접근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으나 식량 분야도 추가하여 토지-물-에너지-식량 연계접근으로 다루어야 함을 강조함. 또한 물 이슈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접근도 비중있게 다루어줄 것을 요청함.
- 영국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이슈와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분석, 에너지 효율성 이슈, 그린밸류체인 접근, 에너지시스템 변환 등의 중요성을 언급함. 미국은 좀더 실효성 있는 대기 관리 방안 모색과 해양 관리 방안을 지적함. 러시아는 생물다양성과 새로운 화학물질(카드늄 등) 이슈의 경제적 및 사회적 측면의 접근에 대해 강조함. BIAC는 혁신과 밸류체인, 자원회소성 대응책 등에 대해 강조함. 멕시코는 자원자원회계와 관련하여 물 거버넌스와 생물다양성 이슈를 터어키는 폐기물관리와 기후변화 대응 지원정책에 대해, 남아프리카는 환경성과 검토와 농업부문의 좋은 환경질 유지(안정성 포함)의 비용과 토지이용변화 등에 대해, 일본의 질소와 인 등의 양분관리와 물 이슈, 지표개발, JWP의 역할과, 프랑스는 생물다양성과 에너지와 물 가격, 자발적 협약 등의 중요성을 강조함.
- EU 대표부는 생물다양성과 환경문제 접근의 비용/편익 분석, 환경악화 대응을 위한 최선의 정책결합(best policy mix)의 중요성을 강조함.

- OECD사무국은 회원국에서 제시된 의견이 차기 PWB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분야별 과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의장은 OECD EPOC에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지만 회원국의 수요에 잘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4 도로교통의 대기오염 비용

□ 논의 목적

- 이 문서는 EPOC 대표들에게 새로운 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알리고,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논의와 2015-16 PWB에서의 이어지는 작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 논의를 위한 주요 질의는 다음과 같음.
 - 1) 대기 오염을 조절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들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비용을 고려하는 새로운 근거를 반영하기 위하여 당신의 국가에서는 정책 평가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
 - 2) 디젤 차량이 대기오염의 가장 큰 주범일 경우, 당신의 국가에서는 디젤 차량 구매 인센티브를 제거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는가.
 - 3) 인간의 도시 대기오염 노출을 제한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조치의 결합을 무엇인가.
 - 4)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의 비용을 추정하는 보다 좋은 방법론에 대한 지원을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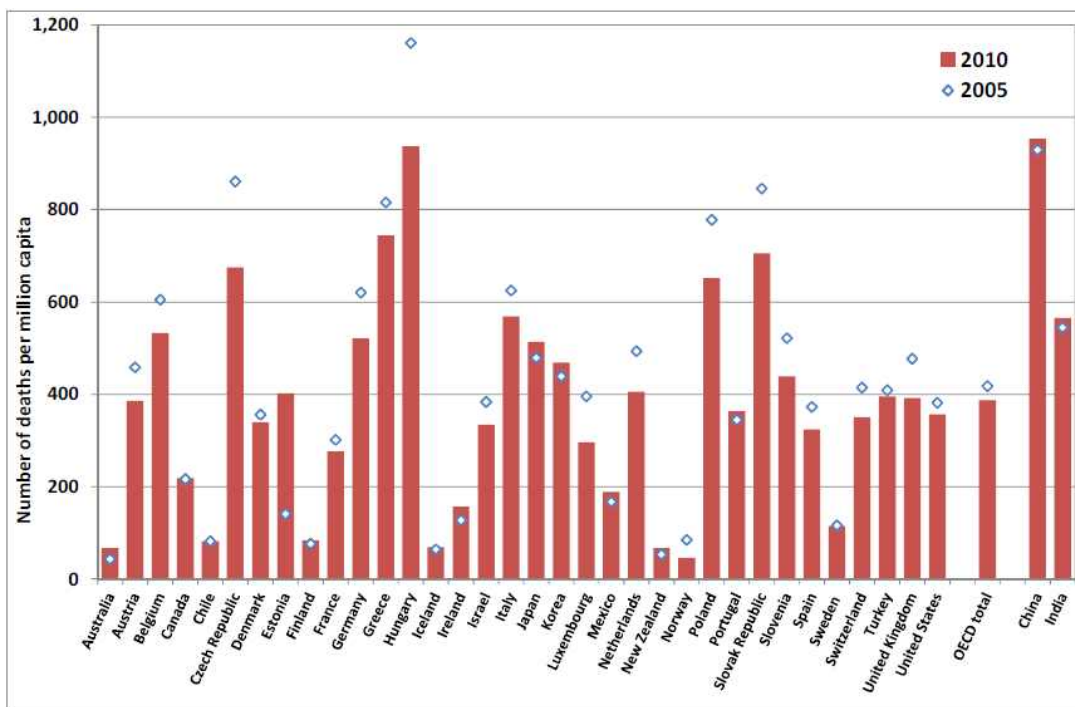
□ 주요 내용

- 1) WHO의 추정치에 따르면 2010년 전세계적으로 약 3.4백만 명이 실외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며, 이는 이전의 추정치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임. 도로 교통으로 인한 오염, 특히 디젤 차량에서의 PM 배출량은 중요한 일반적인 요인으로 생각됨.
- 2) OECD 회원국들에서 도로 교통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경제적 비용은 1.6조 USD에 달함.
 - 이는 도로 교통에 따른 대기 오염이 건강에 영향을 미쳐 사망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비용을 추정하여 계산한 것으로 추정한 결과임. 중국과 인도에서의 대응 비용은 각각 1.4조 USD와 0.4조 USD로 나타남. 실외 대기오염으로 사망자가 10% 증가하는 것을 가정함. 이는 관련 근거가 약함.

- 소득 증가로 통계적 삶의 가치(value of statistical life: VSL)도 높아졌음.
 - 통계적 삶의 가치는 조기 사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한 단위 소비를 희생하는 개인의 의사로 평가할 수 있음.
- OECD 회원국들의 경우, 주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의 비용은 2005~2010년의 5년 동안 10% 증가하여 약 1.6조 USD에 이르렀음.
 - 사망률 추정치를 포함하면, OECD 회원국의 주변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연간 총 경제적 비용은 약 1.7조 USD에 이름.
 - 중국은 2005~2010년 동안 같은 기간에 매우 큰 증가를 보였으며, 2010년 약 1.4조 USD로 추정됨. 인도는 소득과 사망자 수가 낮게 시작하여 2010년 약 0.5조 USD로 나타남.

그림 1. OECD 회원국, 중국, 인도의 주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



- OECD 회원국의 경우 주변 대기오염에서 도로 교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 라면, 연간 총 경제적 비용은 약 0.85조 USD에 이를 것임. 중국과 인도는 도로 교통의 비중이 좀 낮을 것으로 생각됨.

3) 도로교통의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완화- 평가 재고

- 대기 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유발되는 경제적 비용의 규모는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
 - 차량 표준 제도 등의 규제제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필요함.
 - 위험한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정책 수단의 결합에 관심을 두어야 함.
 - 새로운 증거들은 추가적인 조치와 관련된 경제적 비용보다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줄임으로 유발되는 편익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함.
 - 현재의 규제와 세금 규정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 평가를 제시함.

□ 검토의견

- 대기오염으로 인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1만1000여명이 조기 사망하고 경제적 손실액은 최대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지역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추정 및 적정수준 달성 방안’ 연구용역 결과)
 - 수도권 전역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시작한 1989년 이후 최저 오염도는 아황산가스(SO₂)의 경우 0.002ppm, 이산화질소(NO₂)는 0.005ppm, 일산화탄소(CO)는 0.259ppm, 미세먼지(PM)는 m³ 당 18.0 μg, 오존(O₃)은 0.003ppm에 달함.
 - 대기오염으로 인해 단축된 수도권 전체 인구의 총 수명연수를 국내 평균수명(2001년 말 기준 76.5세)으로 나눠 확률적 생명을 산출한 결과 연간 1만1127명(경기 4854명, 서울 5426명, 인천 847명)이 기대수명을 못 채우고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환경부는 2012년말 자동차 등 4개 분야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2024년까지 수도권 초미세먼지를 45%, 미세먼지는 34% 감축하기로 결정함. 2011년 약 5700명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만성기관지염, 호흡기질환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 환경부는 2024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이 비교적 높은 낡은 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며, 낡은 차량에 대해서는 엔진 교체, 매연저감장치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함.

□ 논의결과

- 에스토니아, 그리스, 칠레, 스웨덴, EU, 한국, 일본, 미국, 폴란드 등 많은 회원국이 제시된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대체로 통계적 인간 삶의 가치(value of statistical life)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며 어려운 과제로 평가되나 관련통계나 분석결과는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음.
- 특히 중국 대표는 제시된 내용 가운데 중국의 자료나 분석은 사실과 유리된 감이 있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본인의 주제발표에서 관련내용이 언급될 것임을 상기시킴.

⑤ 환경정책과 생산성 성장- 환경정책의 새로운 국가간 비교의 시사점

□ 논의 목적

- 이 문서는 최근 환경국과 환경정책과 생산성 성장 경제과의 합동작업반에서 논의한 내용을 기초로 함.
- 사무국이 요청한 논의를 위한 주요 질문사항
 - 1) 실증분석 결과에 비추어볼 때, 환경정책과 환경정책 수립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국가의 경험은 무엇인가.
 - 2) 이 분석의 결과가 당신의 국가에서 환경정책 이행을 위한 경제적 사례를 강화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가?
 - 3) 이 분석이 환경정책이 투자, 무역, 고용, 기업의 진입 및 퇴출 행위에 미치는 영향 검증 등과 같이 추가적으로 개발 및 확대될 수 있는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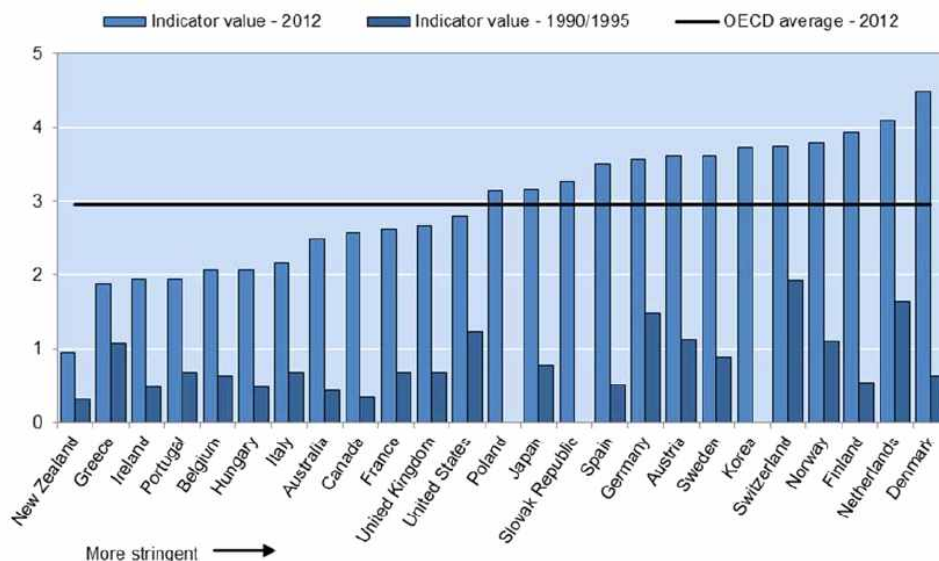
□ 주요 결과

- 1) 웰빙 목표를 다루기 위한 시도인 엄격한 환경정책이 생산성을 낮추는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 2) 정책 엄격성과 경쟁 친화성이 상충적이라는 근거는 없음. 반면, 일부 국가에서 경

쟁과 진입의 부담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엄격한 환경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음. 따라서 엄격한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경제의 녹색화와 지속적인 생산성 증대를 촉진하면서, 진입과 경쟁 장벽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함.

- 지난 20년 이상 환경적 외부성에 표면적으로나 암시적으로 가격을 부과하는 환경 정책 강화는 OECD 회원국들에서 상당히 증가해왔음.
- 새롭게 개발된 OECD 환경정책엄격성(Environmental Policy Stringency: EPS) 지수는 국가별 다양한 정책유형의 엄격성을 보여줌.

그림 1. 환경정책 강화 지수



Notes: The EPS is a de jure indicator, based on a number of selected environmental policy instruments. The index scores from zero to six, where 0 stands for lowest stringency and 6 for highest stringency.

This graph reflects the original data presented at the WPIEEP and WP1 meetings in February 2014. Comments from countries are currently being incorporated and will be reflected in the revised pa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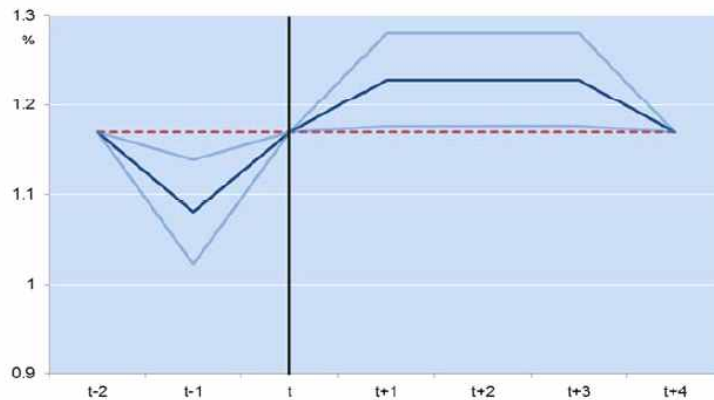
Source: [ENV/EPOC/WPIEEP\(2014\)3](#).

- 환경정책엄격성(EPS) 지수는 생산성에 대한 환경정책엄격성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이용되며,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1) 환경정책강력성이 다중 요소 생산성 증가(Multifactor Productivity Growth, MFP)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없음. 모든 영향은 5년 내에 사라지는 경향이 있음.
 - 2) 환경정책강력성의 긴밀함이 생산성 증가 및 생산성 수준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왔음. 일시적인 축진은 실제 환경정책엄격성 수준에 의존하지는 않으나, 시장기반 환경정책 수단에 대해 더욱 강력함.

- 3) 총 경제수준에서 긍정적인 효과는 정책 발표의 부정적인 예측 효과에 의해 상쇄됨. 따라서 중기 이후부터는 누적효과가 없음.
 - 예측 효과는 기업이 환경정책이 실제로 시행되기 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본과 노동에 투자하는 데서 발생함.

그림 2. 환경정책 강화가 국가수준의 다중 요소 생산성 증가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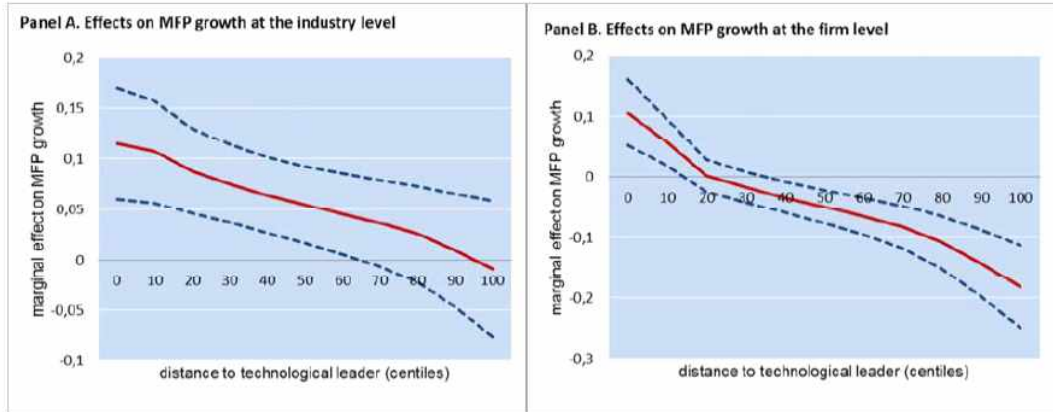


Notes: Effect on multifactor productivity growth (example of Italy, 2010), if environmental regulation is tightened as fast as on average in Denmark. The effects would be the same in magnitude in all countries. The dark blue line represents the effect of a 0.1 increase in the EPS. Confidence intervals are reported in light blue.

Source: [ENV/EPOC/WPIEEP\(2014\)3](#).

- 4) 산업 기반 증거들은 가장 생산적인 산업에서 생산성 증가에서의 이득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줌.
 - 가장 생산성이 낮은 산업은 양의 단기 이윤을 획득할 수 없음<그림 3 panel A>.
 - 이러한 이분산성은 기업수준에서 더 강력하게 나타남. 환경정책의 강화 후에 생산성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은 가장 생산성이 높은 1/3 정도뿐임.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은 변화하는 조건에 빠르게 적응해 수익성을 높임.
- 5) 더욱 강력한 환경정책은 기업이 적응하지 못해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시장의 조정 가운데 한 가지 방식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임.
 - 그러나 차별적인 환경규제로 인하여 일부 기업이 사업을 중단해서는 안 됨.

그림 3. 환경정책 강화가 국가수준의 다중 요소 생산성 증가에 미치는 영향
Relative to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 – as measured by the distance from the global MFP front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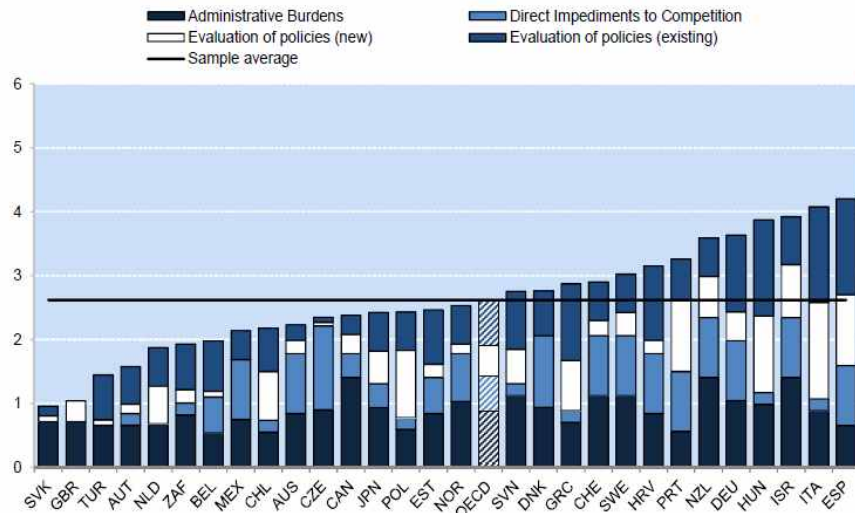


Notes: The marginal effect varies with the distance to the most productive country-industry pairs and firms, respectively. The horizontal axis denotes the centiles of the population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distance from the technological frontier. Dotted line denote 95% confidence intervals.

Source: [ENV/EPOC/WPIEEP\(2014\)3](#)

- 환경법도 역시 시장에서의 경쟁을 방해할 수 있음. 진입과 퇴출의 장애물 증가, 경쟁 압력에서의 현직 보호 등으로 시장 경쟁이 낮아져 미래 생산성 증가가 잠재적으로 저하될 수 있음.
- OECD는 설문 기반으로 환경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Burdens on the Economy due to Environmental Policies, BBEP)에 대한 지수를 통해 진입과 경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찾고자 하였음.
- OECD 평균을 기준으로 회원국을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음.
 - 경쟁 친화적인 환경정책(슬로바키아, 영국, 터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 경쟁에 부담을 주는 환경정책(스페인, 이탈리아, 이스라엘, 헝가리, 독일)

그림 4. 환경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지수



Notes: The indicator is based on a questionnaire, where individual questions are scored and aggregated into an index using equal weights. 0 = least burdensome, 6 highest bur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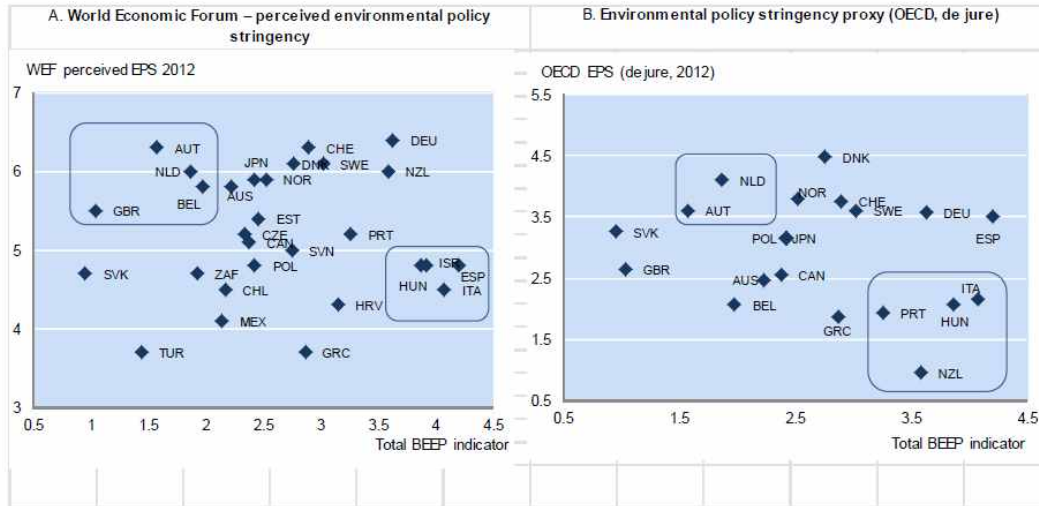
This graph reflects the original data presented at the WPIEEP and WP1 meetings in February 2014. Comments from countries are currently being incorporated and will be reflected in the revised paper.

Source: [ENV/EPOC/WPIEEP\(2014\)3](#).

○ 설문조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출함.

- 1) 높은 진입장벽은 고정비용을 증가시키고, 환경적인 인허가 절차,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정보의 부족, 장황하고 불확실한 절차에 대한 행정적인 부담을 높임.
- 2) 이러한 장애물의 확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쟁친화적인 환경정책 수립으로 환경적·경제적인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음.
- 3) 일반적인 높은 수준의 환경정책강력성은 진입과 퇴출에 대한 높은 부담과 관련성이 없음<그림 5>. 따라서 잘 수립된 강력한 환경정책은 보다 경쟁친화적이면서 행정부담을 낮추고, 신규기업에 대한 차별을 줄일 수 있음.

그림 5. 강력한 환경정책이 반드시 경쟁을 훼손하는 것은 아님



Notes: The left panel looks to the correlation between survey-based World Economic Forum (WEF) index of perceived environmental policy stringency and the BEEP. The right panel captures the relation between the EPS index and the BEEP. No significant correlation is found in either of the two cases.

This graph reflects the original data presented at the WP1EEP and WP1 meetings in February 2014. Comments from countries are currently being incorporated and will be reflected in the revised paper.

Source: ENV/EPOC/WP1EEP/2014/3.

□ 검토의견

- 환경정책과 경제적 성과인 생산성 성장간의 관계(경쟁관계 또는 보완관계)를 실증적으로 다루는 결과물은 회원국의 환경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전통적으로 환경정책은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하고 있음.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일반적인 높은 수준의 환경정책강력성은 진입과 퇴출에 대한 높은 부담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잘 수립된 강력한 환경정책은 보다 경쟁친화적이면서 행정부담을 낮추고, 신규기업에 대한 차별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의미있는 조사결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몇가지 사례를 제시하면 보다 설득력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환경정책의 실행프로그램은 현실적으로 규제와 지원, 정보제공, 교육과 훈련 등 다양한 정책으로 집행되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정책의 엄격성이라는 측면은 강력한 정책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보다 규제적이고 강제적인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엄격성의 개념은 주관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EPS 지수를 통해 객관화한다 해도 집행되는 정책을 포괄적으로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규제적인 측면의 정책 이외에 지원과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등의 정책 프로그램은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할수록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문서에서 제시된 조사결과가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규제적 정책 프로그램의 경우 정책집행을 엄격하게 수행하는 경우 산업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제조업 부문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생산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생산성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물론 환경친화적인 생산시스템이 구축되거나 차별화된 판매전략이 이루어진 경우는 생산성이 크게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됨. 환경정책의 강화와 다요소생산성에 대한 분석은 분석대상과 분석결과 등의 해석에 있어서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특히 보고서에는 분석의 한계점과 제약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임.

□ 논의결과

- 핀란드, 양국, 노르웨이, 벨기에, 스페인 등의 대표는 환경정책과 생산성과의 관계를 여러 측면에서 조명하고 환경정책엄격성(EPS) 지수를 이용한 실증분석 시도는 좋은 접근방법이라는 시각을 제시함. 잘 수립된 강력한 환경정책은 보다 경쟁친화적이면서 행정부담을 낮추고, 신규기업에 대한 차별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함.
- 일본은 환경정책엄격성이 높을수록 생산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분석은 아직은 가설로 보이며, 보다 신뢰성 있고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함. 한국은 정책엄격성이란 용어는 추상적이며 정책집행의 집약도 등 용어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례연구 등 향후 작업방향을 제안함.
- EU는 환경정책엄격성지수의 경우 개별적인 점수를 기초로 하고 있어 주관적인 평가를 내재하고 있어 분석결과의 객관성에 문제를 제기함.
- 사무국은 잘 수립된 환경정책의 생산성 제고는 녹색성장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는 측면이 있고, 환경정책엄격성은 사무국의 정책관련 DB를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능한 한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힘.

⑥ 무대응과 자원희소성의 비용: 장기적 경제성장을 위한 결과(Cost of Inaction and Resource Scarcity; Consequences for Long-term Economic Growth, CIRCLE) 프로젝트

□ 논의 목적

- 이 문서는 CIRCLE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접근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진 진전 내용과 향후 과제 등을 관련분야 주제별로 간단히 요약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논의를 위한 주요 질문사항
 - CIRCLE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진 진전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회원국의 견해는 무엇인가?
 - 특히
 - ① 기후변화 대기오염 통제정책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는지?
 - ② 토지-물-에너지 연계에 있어서 회원국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떤 요소가 중요한지?
 - ③ 물질자원(material resources) 가운데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어느것인지? 주요자원 수입에 대해 자원부족 및 의존을 다루는데 있어서 자원 효율성과 순환경제 정책이 어디에 효과적인지?

□ 주요 내용

- CIRCLE 프로젝트는 2050년 OECD 환경전망과 관련하여 정책적 무대응의 결과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중인 과제임.
- 2050년까지 야심적 정책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기후변화 무대응의 비용과 경과, 생물다양성 손실, 물부족과 대기오염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됨.
- 잠정적 분석결과 자연자원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과 함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 2013년 2월 경제성장에 대한 환경과 자원 도전의 피드백과 관련 정책실행의 편익(상충)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EPOC은 새로운 CIRCLE프로젝트를 추진함. 여기서 CIRCLE프로젝트의 핵심적인 내용의 무대응의 비용 계량화와 실행의 편익(공동편익)의 계량화임.

□ 검토의견

- ENV-Linkages 모형은 농업과 경제의 다른 부문 간의 연계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할 수 있음. 따라서 CGE 모형을 포함한 모델링 기본구조가 다양한 농업 및 환경 정책 하에서 토지이용 변화를 모의실험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됨. ENV-Linkages 모형에는 농업 및 관련 부문 5개가 포함됨. 쌀, 기타 작물, 축산, 산림, 수산부문이 포함됨. 토지는 쌀 및 기타작물 재배, 축산부문의 생산요소로 포함됨. 다른 생산요소는 자본, 에너지, 비료이며 상호간에 어느 정도 대체가능성이 있음.

□ 논의결과

- 헝가리, 러시아, 핀란드, EU, 칠레,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의 대표는 CIRCLE 프로젝트는 OECD 환경정책의 유력한 분석 틀로 상당한 가치를 있으므로 이슈별 계량분석 결과는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함.
- 오스트리아는 CIRCLE 프로젝트에서 물-토지-에너지의 연계 접근(nexus approach)은 유용한 것으로 보이나, 자연자원 이용과 관련하여 식량안보도 중요하므로 물-토지-에너지-식량을 연계한 접근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함.
- 미국과 프랑스는 2015년에 파리에서 개최되는 COP21을 앞두고 CIRCLE프로젝트의 분석결과가 중요한 투입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향후 작업일정(timeline)에 좀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함.
- 영국은 CIRCLE 프로젝트는 정책적인 측면이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유용한 수단으로 볼 수 있으나 대부분의 분석에서 분배적인 측면(distributional aspect)이 간과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가능하다면 이 분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함.
- 사무국은 CIRCLE 프로젝트는 EPOC에서 다루는 핵심과제의 하나이며 여러의견을 수렴하여 균형감각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함. 또한 관련된 분야가 많기 때문에 다부처 관련이슈(cross-cutting issue)를 다루기 위해 특별 분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할 것이며, 분석에 있어서 편익과 공동편익 및 상충 등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자원효율성 측면과 한계성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게 될 것임을 언급함. 또한 진행과정에서 잠정적 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거쳐 보완과정을 거친 후 최종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이며, 작업일정도 차질이 없도록 잘 조정할 것임을 밝힘.

7 JWPAE 의장으로 EPOC관련 발언 요지

- 농업분야의 경우 환경정책 집행의 엄격성이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환경친화적인 상호준수 프로그램(environmental friendly cross-compliance program) 을 들 수 있음, 대표적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프로그램으로 환경친화적인 영농활동을 하는 경우(유기농산물 생산 인증농가 대상) 정부에서 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임. 친환경 농업직불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는 경우 친환경농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좀 하락하더라도 어느정도 보전할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므로 농가의 수익은 하락하지 않을 수 있음.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JWPAE에서도 EPOC 에서 논의되는 이슈가 다루어지고 있음. 특히 농업분야는 다른 산업에 비해 기후변화에 민감한 산업분야이므로 완화도 중요하지만 적응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고, 적응 대책 모색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영향 분석 모델링 작업과 적응을 촉진할 수 있는 공공정책 개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차기 PWB 에서도 비중있게 다룰 예정임.
- 농업위원회회의 PWB 에서 EPOC과 관련된 과제로는 ‘농업의 지속가능성’ 항목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여기서는 ‘농식품 부문의 녹색성장 과제와’ ‘농업과 기후변화’ 등 두 과제로 나누어 다루게 될 것임.
 - 농식품의 녹색성장에서는 ①농업의 녹색성장을 위한 점검과 평가 진전도, ②농업의 녹색성장 차원에서의 생산성 증진과 자연자원의 효율성을 위한 민간부문의 역할, ③지속가능한 식품과 농업을 위한 건실한 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장기 시나리오 등 세가지가 다루어지게 됨.
 - 농업과 기후변화에서는 ①적응과 완화와 농업생산성간의 시너지와 상쇄작용, ②향후 농업용수 핵심과제(hotspot) 등이 다루어지게 됨.
- EPOC과 함께 논의하고 연구하는 수평적 프로젝트로 물 관련 이슈로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농업용수를 다루게 될 것임. 특히 물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과 품목을 알아내고, 농산물 시장에 대한 예상되는 영향을 규명하는 작업을 제안하고 있음.

III. 관찰 및 평가

- OECD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에서 경제적 도전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 언급은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사료됨. 특히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환경 인구고령화 등의 장기도전과제와 대응을 중요한 정책권고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형평의 상충문제, 기후변화·물관리·대체 불가능한 자원 손실 등 글로벌 도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탄소세의 역할, 에너지 관련 인프라 및 투자 규제,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의 성공적인 도출을 위해 OECD 지원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됨.
- 약 20개 회원국이 PWB 2015~16 어젠다와 관련하여 의견을 피력함. 거의 대부분이 행렬방식을 이용한 접근이 설득력을 가진다는 점과 9가지 분야별 제시에 대해 체적인 만족감을 나타냄. 다만 회원국별로 중요성에 대한 비중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PWB 2015~16 어젠다의 논의과제 및 방법론을 논하는 과정에서 9×8 행렬을 이용한 접근방법은 매우 참신하고 설득력이 있는 시도로 높게 평가됨. 따라서 향후 농업환경위원회는 물론이고 관련분야 자료 작성시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하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수립과 평가에 있어서 OECD에서 논의되고 권고하는 방법론이나 분석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좀더 논의되는 문서나 PWB 작업방향 제시에 있어서 환경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OECD 농업환경합동작업반 의장으로 EPOC 고위급회의에 처음 참석하여 농업환경분야 어젠다 뿐만아니라 환경분야 어젠다 논의와 향후 PWB 과제에 대한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되었음. 또한 회원국 대표의 발언은 최대한 존중하여 시간과 내용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되어 의제별로 거의 20개국 대표가 발언하는 적극적인 참여가 인상적이었음.
- 의제별 회원국 발언이 있는 경우 사무국에서 각 발언에 대해 보다 충실하게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하면 5개 회원국 발언이 끝나면 답변토록 하고, 또한

전체 발언이 끝나고 나면 핵심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회원국의 향후 조치사항에 대해 언급토록 함. 의장은 회원국 발언 가운데 답변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 언급하고 특히 사무국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핵심사항을 강조하여 언급함. 차기 회의에서 문서가 보완될 부분을 언급하여 기록에 남도록 함으로써 매우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회의가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JWPAE 의장으로 차기 회의 운영시 벤치마킹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